

* 난이도 평가는 다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1. ⑤ | 정치의 의미 (난이도 ☆)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는 국가 기관의 권력 행사를 정치로 보는 동시에 국가 외 집단에서의 권력 분배 양상도 정치로 보는 반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B는 국가 기관의 권력 행사만을 정치로 본다.

<풀이>

A는 넓은 의미의 정치, B는 좁은 의미의 정치이다.

- ① A는 정치가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 본다.
-> 적절하지 않다.
- ② A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적절하지 않다.
- ③ B는 시민 단체의 대표 선출을 정치로 본다.
-> 적절하지 않다. A가 시민 단체의 대표 선출을 정치로 본다.
- ④ B는 현대의 다원화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A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⑤ A와 B는 모두 의회의 법률 제정을 정치로 본다.
-> 적절하다.

2. ③ | 헌법 (난이도 ★☆)

헌법은 국가의 법 중에서도 최상위의 법으로, 법률의 내용의 방향성을 규정할 뿐 아니라 법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최고 규범성이라 한다.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드러내는 장치로는 여러 헌법의 원리가 있다. 이는 국가 작용과 법률의 방향성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의 원리 중 A는 정치 체제 및 그 운영의 방향성을 명시하여 정부가 단순히 정치적 평등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사에 의한 자유권의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제 영역에서의 자유의 과도한 추구로 오히려 실질적 자유가 저해되었던 역사적 상황을 거울 삼아 법률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끔 방향성을 설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의 원리 B라 볼 수 있다.

<풀이>

A는 자유민주주의 원리, B는 복지국가의 원리이다.

- 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은 법률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고려하는 법치주의를 뒷받침한다.
-> 적절하다. 법률의 내용이 상위법인 헌법의 의도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위헌이며 이는 헌법에 어긋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의 제정을 막기 위함이다.
- ② A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도가 있다.
-> 적절하다. 이 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류의 안전장치가 없었던 국가가 바로 1920년대의 독일 공화국이며, 그 결과 나치의 준동과 투표를 통한 집권으로 민주주의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해체하려는 정당을 해산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자살을 막으려는 제도로서, 자유민주주의 실현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이 제도 또한 남용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
- ③ B는 A의 실현을 항상 저해하고 있다.
-> 적절하지 않다. 지문의 다음 내용을 보자.
...또한 경제 영역에서의 자유의 과도한 추구로 오히려 실질적 자유가 저해되었던 역사적 상황을 거울 삼아...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복지국가 원리와 사회권이 도입되었으므로 복지국가 원리가 자유를 항상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④ B는 국가에 급부의 실현을 요구하는 적극적 성격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
-> 선지에 주어진 권리는 사회권이므로 적절하다.
- ⑤ B는 자유의 보장과 관련이 있다.
-> 3번 선지와 답의 근거가 같으며, 적절하다.

3. ⑤ | 법치주의 (난이도 ★★)

법치주의의 두 유형 A, B를 다음 질문들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A, B는 각각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중 하나이다.)

법치주의 유형		A	B
		질문	
(가)	예	예	
(나)	예	아니요	

<풀이>

A, B는 각각 법치주의의 두 유형 중 하나이지만 모두 법치주의이다.

- ① A, B 모두 자의적 지배를 인정한다.
-> A, B는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고 법을 통해 권한 남용을 제한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A, B 중 하나만 적법 절차의 원리를 강조한다.
-> 적법 절차의 원리는 기본권을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A, B 모두 동의할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가)에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함을 요구하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응시켜 보자.

법치주의 유형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질문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함을 요구하는가?	아니요	예	

그런데 (가)에 대해 두 법치주의 모두 '예'라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나)에는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는 배격되어야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응시켜 보자.

법치주의 유형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질문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는 배격되어야 하는가?	예	예	

그런데 (나)에서는 둘 중 하나만 '예'라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나)가 '악법은 법이 아니라 보는가?'라면 B는 독재의 정당화에 악용될 수 있다.

->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응시켜 보자.

법치주의 유형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질문	
악법은 법이 아니라 보는가?	아니요	예	

(나) 질문에 대해 A는 예, B는 아니요라 답했으므로 A는 실질적 법치주의, B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 ④ | 기본권 + 카드뽑기 (난이도 ★★★★★)

갑, 을은 기본권과 관련된 카드 뽑기 게임을 한다. 카드 5장에는 5종의 기본권의 이름이 A~E의 형태로 적혀 있고 다음 기준에 따라 각 카드별 점수가 산정된다. 복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점수를 모두 더한다.

소극적 권리	1점	적극적 권리	2점	능동적 권리	3점
수단적 권리	2점	포괄적 권리	3점	열거적 권리	0.5점

다음은 카드 목록이다.

카드 1	카드 2	카드 3	카드 4	카드 5
A	B	C	D	E

다음은 게임의 규칙이다.

- 갑, 을은 순서대로 카드 두 장을 뽑는다.
- 갑, 을은 카드 하나씩을 1회 교환할 수 있다.
- 1회 교환 후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승리한다. 점수가 같으면 무승부이다.

다음은 갑, 을이 각각 2장의 카드를 뽑은 후, 각 사람이 소유한 카드의 목록과 점수이다.

갑		을	
카드 1	카드 4	카드 2	카드 5

다음 표는 카드들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점수들이다.

카드 1 + 카드 2 = 6.5점	카드 2 + 카드 3 = 7.5점
카드 1 + 카드 4 = 7.5점	카드 3 + 카드 4 = 8.5점
카드 1 + 카드 2 + 카드 5 = 9점	카드 2 + 카드 5 = 5.5점

<풀이>

기본권 5개를 다음 기준에 대응시켜 보고 점수를 구하자.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소극적 권리	O	X	X	X	X
적극적 권리	X	X	O	O	X
능동적 권리	X	X	X	X	O
수단적 권리	X	X	X	O	X
포괄적 권리	O	O	X	X	X
열거적 권리	X	X	O	O	O
점수	4점	3점	2.5점	4.5점	3.5점

갑, 을의 카드는 다음과 같다.

갑		을	
카드 1	카드 4	카드 2	카드 5

카드들의 점수를 알기 위해 카드의 조합으로 구성된 점수표를 보자.

카드 1 + 카드 2 = 6.5점	카드 2 + 카드 3 = 7.5점
카드 1 + 카드 4 = 7.5점	카드 3 + 카드 4 = 8.5점
카드 1 + 카드 2 + 카드 5 = 9점	카드 2 + 카드 5 = 5.5점

이런 표를 보았을 때는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구해야 한다.

카드 1 + 카드 2 + 카드 5 = 9점이고 카드 1 + 카드 2 = 6.5점이므로, 두 식을 빼면 카드 5가 2.5점임을 알 수 있다. 2.5점인 카드는 사회권이므로 카드 5는 사회권이다.

카드 1 + 카드 2 + 카드 5 = 9점이고 카드 2 + 카드 5 = 5.5점이므로 카드 1은 3.5점임을 알 수 있다. 3.5점인 카드는 참정권이므로 카드 1은 참정권이다.

카드 1 + 카드 4 = 7.5점인데 카드 1은 3.5점이므로 카드 4는 4점이다. 4점인 카드는 자유권이므로 카드 4는 자유권이다.

카드 1 + 카드 2 = 6.5점인데 카드 1이 3.5점임을 알고 있으므로 카드 2는 3점이다. 3점인 카드는 평등권이므로 카드 2는 평등권이다.

카드 2 + 카드 3 = 7.5점인데 카드 2는 3점이므로 카드 3은 4.5점이다. 4.5점인 카드는 청구권이므로 카드 3은 청구권이다.

정리해 보면

카드 1	참정권	3.5점
카드 2	평등권	3점
카드 3	청구권	4.5점
카드 4	자유권	4점
카드 5	사회권	2.5점

이다. 이제 선지를 보자.

ㄱ. C는 청원권을 포함한다.

-> 카드 3은 C이다. C는 청구권인데 청구권은 청원권을 내용 중 하나로 하므로 적절하다.

ㄴ. A와 E는 열거적 권리이다.

-> 카드 1은 A, 카드 5는 E이고, A는 참정권, E는 사회권이다. 이 두 권리는 모두 열거적 권리이다.

ㄷ. 카드 4와 카드 2를 교환하면 갑이 승리한다.

카드 4와 카드 2를 교환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갑		을	
카드 1	카드 2	카드 4	카드 5
3.5점	3점	4점	2.5점

점수가 같으므로 무승부이다.

따라서 답은 ㄱ, ㄴ 이다.

5. ② | 정부형태 + 미국식 임기 (난이도 ★★★★★)

갑국에는 A~D당만 존재하며 총 의석 수는 300석이다. 12대 의회가 존재하는 시점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었다. 다음은 국가 원수와 의회 선거 규정이다. 이때, 12대 의회 시기 중 11대 국가원수가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다.

- 국가 원수와 의회 의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다.
- 국가 원수 선거 2년 후에 의회 의원 선거가 열린다.

갑국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융합시키는 방향으로 정부 형태를 변경할 때, 변경 시기의 의회 의원 임기를 2년 단축하여 국가원수의 임기와 의회 의원의 임기가 같은 시점에 종료되게 하고 의회 의원을 100석 증가시켰다. 다음은 12~15대 의회에서 갑국의 정당별 의석률과 여소야대 여부이다.

	A당	B당	C당	D당	여소야대
12대	40%	30%	20%	10%	O
13대	25%	55%	15%	5%	O
14대	35%	30%	10%	25%	X
15대	40%	20%	25%	15%	X

* O - 여소야대, X - 여소야대가 아님
* 11대 및 그 이후 국가원수는 모두 정해진 임기를 채웠음.

<풀이>

- 국가 원수와 의회 의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다.
- 국가 원수 선거 2년 후에 의회 의원 선거가 열린다.

이 규정에 따라, 국가원수와 국회의원 임기는 2년씩 엇갈린다. 12대 의회 시기 중 11대 국가원수가 퇴임했다는 사실을 통해 12대 의회가 성립된 지 2년 후 11대 국가원수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원수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의회 의원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와 같이 될 것이다. 갑국의 12대 의회 시점에서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었으므로 12대 시점에는 대통령제이지만 이후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석 분포와 여소야대 여부를 통해 어느 시점에 정부 형태를 바꿨는지 추론할 수 있다.

	A당	B당	C당	D당	여소야대
12대	40%	30%	20%	10%	O
13대	25%	55%	15%	5%	O
14대	35%	30%	10%	25%	X
15대	40%	20%	25%	15%	X

13대에는 다수당과 집권당이 달랐으며, 14대에는 과반 정당이 없음에도 여소야대가 아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당 세력이 단독 과반을 만들든, 연립 정부를 수립하든 항상 과반이므로 다수 세력이다. 그러므로 14대에서 연립 정부가 만들어지고 의원 내각제였음을 알 수 있다. 변경 시기의 의회 의원 임기를 2년 단축하여 국가원수의 임기와 의회 의원의 임기가 같은 시점에 종료되게 하고 의회 의원을 100석 증가시켰으므로 임기는 다음과 같이 변한다.

국가 원수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의회 의원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이제 선지를 보자.

① 15대에서 집권 세력의 의석 수가 240석일 수 있다.
-> 15대 의회의 정원은 400석이므로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A당	B당	C당	D당	계
15대	160	80	100	60	400

A당과 B당이 연립 내각을 수립한다면 240석이 되므로 적절하다.

- ② 13대 의회 의원의 임기는 12대 의회 의원의 절반이다.
-> 적절하지 않다. 14대 의원의 임기가 13대의 절반이다.
- ③ 정부 형태 변경 이후 국가 원수와 의회의 몫수 차이는 1이다.
-> 적절하다.

- ④ 14대와 달리 13대에서는 의회가 국가 원수를 탄핵 소추할 수 있다.
-> 적절하다.
- ⑤ 13대 국가원수 재임기와 13대 의회의 존속 기간은 겹치는 시기가 존재한다.
-> 적절하다.

6. ④ | 국가기관 (난이도 ★★★)

A는 B에 갑을 국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C로 임명할 것을 제청하였고 B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국회 의원 선거 결과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D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과 국민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E의 구성원 선출에 난항을 겪었다. 한편 F는 행정 명령이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

<풀이>
사례를 분석해 보자.

A는 B에 갑을 국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C로 임명할 것을 제청하였고 B가 이를 받아들여 갑을 C로 임명했다.
-> 국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다. 그런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제청을 한 A는 국무총리, 제청을 받은 B는 대통령이고 C는 국무위원이다.

이후 국회 의원 선거 결과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D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과
-> 예산안 확정 = 국회에서 하므로 D는 국회이다.

국민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E의 구성원 선출에 난항을 겪었다.
-> 국민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결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므로 E는 헌법재판소이다.

한편 F는 행정 명령이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
-> 위법 명령의 최종 심사는 대법원이 하므로 F는 대법원이다.

- ① C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의 부의장이다.
-> C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 (국무회의)에 참여할 뿐이며, A가 부의장이다.
- ② F의 장(長)은 E의 구성원 3인을 임명할 수 있다.
->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한다. 헌법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A는 D와 달리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국무총리와 국회 모두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E, F의 장(長), A는 C와 달리 D의 동의를 얻어 B가 임명한다.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장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 ⑤ B는 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D의 동의 없이 비준할 수 있다.
-> 상호 방위 조약은 주요 조약이므로 비준하는 데 있어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다.

7. ③ | 지방자치 (난이도 ★★)

[서술형 평가]
 다음을 보고 지방 자치와 관련된 기관 A, B의 권한을 각각 2개씩 서술하시오.
 A와 B는 모두 지방 선거에서 주민의 투표를 통해 구성되고, 이 둘의 관계는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때, B는 A와 달리 한 번에 4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학생의 답안]

		답안	채점 결과
A	1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권	1점
	2	(가)	
B	1	(나)	㉠
	2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통할 대표권	

(각 내용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임.)

<풀이>
 B는 A와 달리 한번에 4연임을 할 수 없으므로,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고 A는 지방 의회이다. 이제 학생의 답안을 보자.

		답안	채점 결과
A	1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권	1점
	2	(가)	
B	1	(나)	㉠
	2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통할 대표권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권은 지방 의회(A)의 권한이고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통할 대표권은 지방 자치 단체장(B)의 권한이므로 모두 맞다. 학생이 받은 점수가 1점인 것을 통해 학생이 A의 권한 두 개 중 하나만을 제대로 썼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한편,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통할 대표권은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이므로 맞다. 그러므로 ㉠은 1점 이상이다.

① ㉠은 0점이 될 수 있다.
 -> ㉠은 1점 이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는 '주민 청원 수리권'이 될 수 있다.
 -> 주민 청원 수리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인데, (가)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가 '조례안 거부권'이라면 ㉠은 2점이다.
 -> 지방 자치 단체장은 조례안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나)는 맞게 된다. 그러므로 ㉠은 2점이다.

④ A와 B 사이의 권력 분립 관계는 수직적이다.
 ->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권력 분립 관계는 수직적이지만 지방 의회(A)와 지방 자치 단체장(B)의 권력 분립 관계는 수평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A와 B의 모든 구성원은 임기 중 주민의 투표로 해임될 수 있다.
 -> 임기 중 주민의 투표로 해임되는 것은 주민 소환인데, 지방 의회(A)의 비례 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8. ① | 헌법재판소 (난이도 ★★★)

갑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을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갑의 변호인인 병은 A에 상소하였으나 A가 기각하자 B에 다시 상소하였고 B는 을이 증인이 될 수 있다 판단했다. 한편 1심 재판 중 갑의 주요 혐의와 관련된 OO법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판단한 갑은 (가)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C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C는 OO법이 헌법에 합치되며 기본권을 적절히 제한한다 판단하였다. 같은 시기에 정은 개발 제한 구역 설정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에 건축하고자 했던 펜션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개발 제한 구역을 규정한 법률이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C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C는 개발 제한 구역 설정이 기본권 제한의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기각하였다.

<풀이>
 일단 사례를 분석해 보자.

갑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을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갑의 변호인인 병은 A에 상소하였으나 -> 1심이 지방 법원 합의부이면 상급심인 2심은 고등법원(A)이다.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고등 법원에 항고하였다.

A가 기각하자 B에 다시 상소하였고 B는 을이 증인이 될 수 있다 판단했다. -> 변호인은 고등 법원보다 상급 법원인 대법원(B)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변호인의 재항고를 받아들였다.

한편 1심 재판 중 갑의 주요 혐의와 관련된 OO법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판단한 갑은 (가)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C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 (가)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갑이 C에 청구한 헌법 소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C는 헌법 재판소이다.

C는 OO법이 헌법에 합치되며 기본권을 적절히 제한한다 판단하였다. -> 갑의 헌법 소원은 기각되었으며 헌법 소원 대상 법률은 합헌이다.

같은 시기에 정은 개발 제한 구역 설정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에 건축하고자 했던 펜션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개발 제한 구역을 규정한 법률이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C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 정이 청구한 헌법 소원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C는 개발 제한 구역 설정이 기본권 제한의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기각하였다. -> 개발 제한 구역 설정은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하였고 합헌이다.

이제 선지를 보자.
 ㄱ. A가 병의 항고를 기각하여 병은 B에 재항고하였다.
 -> 적절하다.

ㄴ. C는 갑의 헌법 소원 대상 법률과 정은의 헌법 소원 대상 법률이 합헌이라 보았다.
 -> 적절하다.

ㄷ. 갑은 (가) 제청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결정 기각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ㄹ. 갑과 정은이 청구한 헌법 소원은 모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갑은 위헌 심사형, 정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9~10] | 민법의 원리 + 불법행위 (분석 난이도 ★★★★★)

(가) 친구인 갑 소유의 X 건물을 임차하여 전자 제품점을 운영하던 을은 법정 대리인 정 의 동의를 받지 않은 병 (16세)과 고가의 노트북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시 을은 병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 병이 다녀간 다음 무는 을의 전자 제품점에서 산 카메라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가게에 찾아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규정상 안 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무는 분노하여 을의 직원 기를 폭행하였고 기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갑은 이 사실을 알고 가게에 찾아와 을과 기를 위로했고, 경의 Y 건물을 임차하여 신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였다. 신의 직원 임은 음식을 포장하던 중 상한 피클을 실수로 같이 넣었고 이를 먹은 갑, 을, 기가 장염에 걸렸다. 이들이 식당에 와서 항의하던 중 직원 계가 갓 조리된 수프를 운반하다가 식탁에 걸러 넘어지며 이를 갑, 을에게 쏟았다. 이로 인해 갑은 화상을 입었고 을은 이를 피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G (17세)와 부딪혀 G의 휴대폰을 파손시켰다. 휴대폰의 파손에 화가 난 G는 을을 폭행했다.

(나) 남성인 H는 길을 걷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성인 I와 마주쳤다. I는 H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다 착각하여 비명을 지르며 H의 뺨을 때렸고 H가 옆으로 넘어져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놀란 I는 도망치다가 J와 부딪혔다. 이로 인해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던 J는 커피가 쏟아져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J는 K가 L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던 중 병원 직원 M이 의사 K의 처방을 잘못 들어 처방전에 다른 약을 적었다.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J는 부작용을 겪어 이에 항의하기 위해 K의 병원에 방문했다. 그런데 천장의 에어컨이 J의 발 위로 떨어져 발등 관절을 골절시켰다.

매우 끔찍한 막장 사례가 주어졌지만, 일단 차근차근 뜯어 보자.

(가)

친구인 갑 소유의 X 건물을 임차하여 전자 제품점을 운영하던 을은
-> 갑은 소유자, 을은 점유자이다.

법정 대리인 정 의 동의를 받지 않은 병 (16세)과 고가의 노트북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시 을은 병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
-> 병과 정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을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병은 제한능력자이고 을은 미성년자의 계약 상대방이기 때문이다.

병이 다녀간 다음 무는 을의 전자 제품점에서 산 카메라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가게에 찾아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규정상 안 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무는 분노하여 을의 직원 기를 폭행하였고 기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무는 기에게 일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무는 기에게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다.

갑은 이 사실을 알고 가게에 찾아와 을과 기를 위로했고, 경의 Y 건물을 임차하여 신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였다.
-> 갑과 경의 계약이다.

신의 직원 임은 음식을 포장하던 중 상한 피클을 실수로 같이 넣었고 이를 먹은 갑, 을, 기가 장염에 걸렸다.
-> 사용자는 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경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임은 갑, 을, 기에게 업무 중 일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사용자인 신은 임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따라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이들이 식당에 와서 항의하던 중 직원 계가 갓 조리된 수프를 운반하다가 식탁에 걸러 넘어지며 이를 갑, 을에게 쏟았다. 이로 인해 갑은 화상을 입었고 을은 이를 피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G (17세)와 부딪혀 G의 휴대폰을 파손시켰다.
-> 사용자는 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경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계는 갑에게 업무 중 일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사용자인 신은 계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따라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을은 현재 자신에게 가해지는 위난 (쏟아지는 수프로 인한 화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G에게 부득이하게 휴대폰을 파손시키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을은 G에게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휴대폰의 파손에 화가 난 G는 을을 폭행했다.

-> G는 을에게 일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G는 미성년자이다. G의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G의 법정 대리인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만 책임 능력이 없다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나)

남성인 H는 길을 걷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여성인 I와 마주쳤다. I는 H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다 착각하여 비명을 지르며 H의 뺨을 때렸고 H가 옆으로 넘어져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 I는 H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H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위법성 자체가 없어 긴급 피난도 그 무엇도 아니며 그저 적법한 행위일 뿐이다.

놀란 I는 도망치다가 J와 부딪혔다.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던 J는 커피가 쏟아져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 I는 J에게도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J는 K가 L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는데,
-> K는 점유자, L은 소유자이다.

치료를 받던 중 병원 직원 M이 의사 K의 처방을 잘못 들어 처방전에 다른 약을 적었다.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J는 부작용을 겪어
-> 사용자는 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경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M은 J에게 업무 중 과실로 인한 일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사용자인 K는 M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따라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K의 병원에 방문했다. 그런데 천장의 에어컨이 떨어지며 J의 발을 다치게 했다.
-> 원칙적으로는 K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점유자인 K가 손해 방지 및 안전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한다면 소유자 L이 면책되지 않는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9. ④ | 민법의 원리 (난이도 ★★★)

<풀이>

ㄱ. K는 J에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

-> K는 점유자이므로 책임을 지더라도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ㄴ. 갑과 을의 계약은 계약 공정의 원칙의 규율을 받는다.

-> 적절하다.

ㄷ. 무와 I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무가 기를 폭행한 것은 명백히 무 자신의 잘못이므로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I는 H를 밀치고 J에게도 화상을 입혔으므로 과실이 있다. 따라서 I도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10. ⑤ | 불법 행위 (난이도 ★★★★★)

<풀이>

① 신이 임과 계의 선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더라도 기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따라,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어 취소권이 배제되므로 철회할 수 없다.

③ K가 에어컨의 안전 관리 및 손해 방지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L이 J에게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 앞의 분석을 보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K의 병원에 방문했다. 그런데 천장의 에어컨이 떨어지며 J의 발을 다치게 했다.

-> 원칙적으로는 K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점유자인 K가 손해 방지 및 안전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한다면 소유자 L이 면책되지 않는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K가 에어컨의 안전 관리 및 손해 방지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L이 J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을의 G에 대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을은 G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앞의 분석을 보자.

을은 이를 피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G (17세)와 부딪혀 G의 휴대폰을 파손시켰다.

-> 을은 현재 자신에게 가해지는 위난 (쏟아지는 수프로 인한 화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G에게 부득이하게 휴대폰을 파손시키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을은 G에게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을의 G에 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G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⑤ G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G의 감독 의무자가 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앞의 분석을 보자.

휴대폰의 파손에 화가 난 G는 을을 폭행했다.

-> G는 을에게 일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G는 미성년자이다. **G의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G의 법정 대리인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만 책임 능력이 없다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다.

11. ② | 미성년자의 계약 (난이도 ★★)

다음은 법적 사례이다.

갑 (16세)은 을 (30세)의 키보드 상점에 방문하여 법정 대리인인 병의 동의 없이 키보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밑의 표는 다음 법적 사례에 관하여 가능한 경우들을 모두 표시한 것이다.

1	키보드 가격이 갑의 용돈의 금액보다 낮음	2	키보드 가격이 갑의 용돈의 금액보다 높음
3	을이 갑의 나이를 앎	4	을이 갑의 나이를 모름
5	갑이 신분증을 위조함	6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지 않음

(단, 같은 행에 있는 내용들은 상호 배타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음.)

<풀이>

1과 2는 취소권 여부를, 3과 4는 철회권 여부를, 5와 6은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 여부를 가른다. 정리해 보면

	1	2
취소권	X	O

	3	4
철회권	X	O

	5	6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됨	배제되지 않음

* 미성년자는 용돈의 범위에서 단독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 갑이 용돈으로 키보드를 구매하거나,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 한 을은 병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① 갑은 의사 능력이 제한된다.

->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능력자이지, 의사 능력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② 2, 4, 6의 경우 을은 병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1	2
취소권	X	O

	3	4
철회권	X	O

	5	6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됨	배제되지 않음

병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③ 2, 3, 6의 경우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1	2
취소권	X	O

	3	4
철회권	X	O

	5	6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됨	배제되지 않음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④ 1의 경우에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지 않아 병의 추인이 필요하다.

-> 1의 경우에는 갑이 키보드를 용돈으로 구매했으므로 병의 추인이 필요 없다.

㉔ 2, 4, 5의 경우 을은 갑의 연령 사기를 이유로 체결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1	2
취소권	X	0

	3	4
철회권	X	0

	5	6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됨	배제되지 않음

이 경우에는 을의 철회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12. ㉔ | 가족법 (난이도 ★★★★★)

[수행 평가]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을 보고 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를 적으시오. (답란별로 채점하며 옳으면 1점, 틀리면 0점, 총점은 3점임. 사례에 나온 인물들만 고려함.)

<사례>

갑(18세)은 을(26세)과 법률혼 관계를 맺었으나, 동시에 같은 학교 학생 병(18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병과의 사이에서 자녀인 정이 있었다. 을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해 갑의 생일이 오기 전에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하였다. 무는 기와의 사이에서 자녀 경을 두고 있었는데, 기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조정을 통해 이혼하였다. 무는 을과 재혼하였고 을은 경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학생의 답안]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답안
(가)		예
정은 생부의 인지가 없어도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나)
갑과 을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다.		아니요
점수	(다)	

<풀이>

일단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사례를 분석해 보자.

갑(18세)은 을(26세)과 법률혼 관계를 맺었으나, 동시에 같은 학교 학생 병(18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병과의 사이에서 자녀인 정이 있었다.

-> 갑은 양다리를 너무 크게 걸쳐 버렸고, 병과의 사이에서 생긴 혼인 외의 출생자인 정도 있다. 그리고 18세에 법률혼을 했으므로 성년으로 의제된다.

을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해 갑의 생일이 오기 전에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하였다.

-> 갑은 19세가 되기 전에 이혼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성년 의제의 효력은 유지된다. 또한 사례에 나온 인물들만 고려한다는 조건에 따라 자녀가 없으므로 이혼 숙려 기간은 1개월이다.

무는 기와의 사이에서 자녀 경을 두고 있었는데, 기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조정을 통해 이혼하였다.

-> 조정을 통해 이혼하였으므로,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중에 조정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무는 을과 재혼하였고 을은 경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 미성년자만 친양자로 입양될 수 있으므로 경은 미성년자이다.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경과 기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이제 주어진 판단의 정오를 알아보자.

정은 생부의 인지가 없어도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적절하다. 정은 혼외자이지만, 혼외자 역시 생모와는 친자 관계가 자동적으로 생긴다. 친자 관계가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다.

-> 갑과 을의 이혼 숙려 기간은 1개월이다. 학생은 이 진술에 '아니요'라 답했으므로 1점을 얻는다.

그러므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답안	점수
(가)		예	?
정은 생부의 인지가 없어도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O)		(나)	?
갑과 을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다. (X)		아니요	1점
점수	(다) (1점~3점)		

이다.

① (다)는 3점이 될 수 없다.

-> (다)는 (가), (나)에 따라 3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에 '경은 성인이 아니다.'가 들어가고 (나)에 '예'가 들어간다면 (다)는 2점이다.

-> 사례 분석을 보자.

무는 을과 재혼하였고 을은 경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 미성년자만 친양자로 입양될 수 있으므로 **경은 미성년자**이다.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경과 기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그러므로 (가)는 '예'가 정답이다. (가)를 채우고 (나)에 '예'를 넣으면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답안	점수
경은 성인이 아니다. (O)	예	1점
정은 생부의 인지가 없어도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O)	예	1점
갑과 을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다. (X)	아니요	1점
점수	(다) (3점)	

(다)는 3점이다.

③ (가)에 '갑은 이혼으로 인해 민법상 성인으로 대우받을 수 없다.'가 들어가고 (나)에 '아니요'가 들어간다면 (다)는 2점이다.

-> 성년 의제의 효력은 이혼 이후에도 유지되므로 갑은 이혼 이후에도 민법상 성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가)는 틀렸다. (나)에 '아니요'를 넣으면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답안	점수
갑은 이혼으로 인해 민법상 성인으로 대우받을 수 없다. (X)	예	0점
정은 생부의 인지가 없어도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O)	아니요	0점
갑과 을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다. (X)	아니요	1점
점수	(다) (1점)	

(다)는 1점이다.

④ (가)에 '갑, 을의 이혼과 무, 기의 이혼 모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가 들어가고 (나)에 '예'가 들어간다면 (다)는 2점이다.

-> 갑, 을의 이혼은 협의 이혼이므로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무, 기의 이혼은 조정 이혼이므로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는 틀렸다. (나)에 '예'를 넣으면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답안	점수
갑, 을의 이혼과 무, 기의 이혼 모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X)	예	0점
정은 생부의 인지가 없어도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O)	예	1점
갑과 을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다. (X)	아니요	1점
점수	(다) (2점)	

(다)는 2점이다.

⑤ (가)에 '무가 유언 없이 사망하더라도 경은 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가 들어가고 (나)에 '아니요'가 들어간다면 (다)는 1점이다.

-> 무와 경의 친자 관계가 유지되므로 경은 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는 맞다. (나)에 '아니요'를 넣으면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답안	점수
무가 유언 없이 사망하더라도 경은 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O)	예	1점
정은 생부의 인지가 없어도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O)	아니요	0점
갑과 을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다. (X)	아니요	1점
점수	(다) (2점)	

(다)는 2점이다.

13. ③ | 현실주의 + 자유주의 (난이도 ★)

갑 : 모든 정치가들은 국가이익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쟁한다.
 을 : 평화란 승리가 없는 평화가 아니면 안 된다. 승리란 패자에게 군림하는 강압적인 평화를 뜻한다.

갑은 현실주의, 을은 자유주의이다.

① 갑: 국가만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는 아니다.

-> 적절하다.

② 갑: 국가는 타국의 행동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 적절하다. 국가는 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2023 수능 생운)

③ 을: 강제력을 지닌 국제 정부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 자유주의는 세계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지 않는다.

④ 을: 제도 개선과 편견의 극복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적절하다.

⑤ 갑, 을: 국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존재한다.

-> 적절하다.

14. ④ | 죄형법정주의 + 위법성 조각 사유 (난이도 ★★★★★)

(가) 갑은 을이 칼을 들고 쫓아오자 골목길로 도망치다가 막다른 곳에 도달했다. 갑은 담벼락을 넘어 비어 있는 병의 집의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모든 문을 잠가 위기를 모면했다.

(나) 무는 온라인 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타인이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무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풀이>
사례를 분석해 보자.

(가)
갑은 **을이 칼을 들고 쫓아오자** 골목길로 도망치다가 막다른 곳에 도달했다. 갑은 담벼락을 넘어 비어 있는 병의 집의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모든 문을 잠가 위기를 모면했다.
-> 갑은 자신의 법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피하기 위해 주거 침입을 저질렀다. 이는 긴급 피난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위법한 침해에 대한 대응이 **제3자를 향하면** 긴급 피난이고, **침해를 저지르는 자를 향하면** 정당방위이다.

(나)
무는 온라인 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타인이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무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 무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만든 것을 이용하였고 자신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될 수 없다.

ㄱ. 병이 갑이 담벼락을 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이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갑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적법한 행위이다. 적법한 행위는 위법한 침해가 될 수 없으므로, 병이 갑을 막더라도 이를 정당 방위로 볼 수는 없다.

ㄴ.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긴급피난이므로 적절하다.

ㄷ. 무를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무를 처벌하게 된다면, 타인이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생성한 것으로 보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처벌한 것인데 이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ㄹ.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간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15. ④ | 형사절차 + 소년 사건 (난이도 ★★★★★)

갑 (22세)은 친척 동생 을 (14세)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병 (13세)이 을이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을을 폭행하였고 이에 갑과 을이 병을 폭행하였다. 이후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갑은 구속되었고 기소 이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려는 시도를 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갑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벌의 선고를 2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풀이>
우선 사례를 분석해 보자.

갑 (22세)은 친척 동생 을 (14세)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병 (13세)이 을이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을을 폭행하였고 이에 갑과 을이 병을 폭행하였다.

-> 갑과 을은 폭행죄를 저질렀고, 병 역시 마찬가지이다. 병은 13세이므로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이지만, 을은 14세이므로 범죄소년이다.

이후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갑은 구속되었고 기소 이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려는 시도를 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 갑은 보석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거부했다.

갑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벌의 선고를 2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 갑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① 경찰은 을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 을은 14세이므로,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다.

② 갑은 재판 중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였다.

->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 중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판결 확정 이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구속당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잘못된 판결로 옥살이를 하였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경우에는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선고 유예는 무죄가 아니므로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을을 기소한다면 을은 보안 처분과 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적절하다.

⑤ 경찰이 병을 검사에게 송치한다면 검사는 병에게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병은 13세이므로 검사에게 송치될 수 없으며, 무조건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

16. ㉓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난이도 ★★★)

갑 (17세)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그런데 갑이 A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을은 갑을 별다른 통보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해 버렸다. 갑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였다. 을은 불복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되었다.

<풀이>

사례를 분석해 보자.

갑 (17세)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 17세이므로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법에 어긋난다.

그런데 갑이 A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을은 갑을 **별다른 통보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해 버렸다.**

-> 을의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이자 부당 해고이다.

갑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였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을의 행위가 부당 해고라 보았다.

을은 불복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되었다.

-> 중앙 노동 위원회는 을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을의 행위를 부당 해고로 보았다.

① 갑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 3권을 침해받은 것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할 수 있다.

->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갑의 근로 계약서는 근로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으므로 모든 내용이 무효이다.

-> 근로 계약의 경우, 법에 어긋나는 부분만 무효이다.

③ A 노동조합은 갑이 당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지방 노동 위원회에 할 수 있다.

-> 적절하다.

④ 을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 노동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적절하지 않다.

⑤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가 내린 갑의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르다.

-> 둘 다 갑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 보았다.

17. ㉓ | 노동법 (난이도 ★★★★★)

갑, 을, 병은 2024년에 OO할인점 사장 A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은 이 세 명의 계약 내용 중 공통된 부분이다.

- 시급은 11,000원이고 이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
- 근무일은 수요일부터 일요일이고, 휴무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이다.
-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근무하며 휴식 시간은 1시간이다.
- 근무 장소는 OO할인점이다.
- 계산대에서 상품 가격을 계산하는 업무를 한다.

*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임.

다음은 질문을 통해 갑, 을, 병을 구분한 것이다. ㉠, ㉡은 각각 '예' 또는 '아니요'이다.

	갑	을	병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까?	㉠	㉡	㉢
1주에 총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까?	㉠	㉢	㉡
가족 관계 증명서를 업무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까?	㉢	㉠	㉢

<풀이>

일단 두 경우를 보고 모순이 없는 것을 선택하자.

1) ㉠이 '아니요', ㉡이 '예'

	갑	을	병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1주에 총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가족 관계 증명서를 업무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까?	예	아니요	예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데, 즉 성인인데 1주에 총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

2) ㉡이 '예', ㉠이 '아니요'

	갑	을	병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까?	예	예	아니요
1주에 총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예
가족 관계 증명서를 업무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이 경우에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1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가족 관계 증명서를 비치할 필요가 없는 갑은 18세이며,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병은 19세 이상이며, 을은 15~17세이다.

① ㉠은 '아니요', ㉡은 '예'이다.

-> 적절하지 않다.

② 갑~병 중 계약 내용이 법정 노동 시간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

-> 공통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하루 근무 시간은 7시간이다. 연소 근로자는 7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으므로 법정 노동 시간을 준수하였다.

③ A는 갑의 가족 관계 증명서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서도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 갑은 18세이므로 보호자 동의서도 비치할 필요가 없다.

④ 을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위조하여 계약을 맺었다면 A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을은 미성년자이므로 동의서 위조로 계약을 맺은 경우 취소권이 배제된다.

⑤ 갑과 병은 A와 합의하더라도 하루에 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다.

-> 갑, 병은 하루에 2시간씩 연장 근로를 A와 합의 하에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8. ① | 국제법 (난이도 ★★★)

	A	B	C
㉠	X	O	X
㉡	O	㉢	O
㉣	X	O	O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구속력을 가짐 ●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을 포함함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임

<풀이>

일단 특징들에 요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을 대응시켜 보자.

	요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포괄적 구속력을 가짐	X	O	O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을 포함함	X	X	O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임	O	O	O

㉠은 X가 1개, O가 2개이므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짐'이다. 그러므로 A는 조약이다. ㉡은 X가 2개, O가 1개이므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을 포함함'이다. 그러므로 C는 국제 관습법이다. 남은 B는 법의 일반 원칙이고 ㉣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임'이다. ㉣은 O가 3개여야 하므로 ㉢은 O이다.

㉣. ㉢은 'O'이다.

-> 적절하다.

㉡. ㉡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을 포함함'이다.

-> 적절하지 않다.

㉣. B는 대통령이 체결해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A에 대한 설명이다.

19. ⑤ | 국제기구 (난이도 ★★)

갑국이 을국을 침공하자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 A에서는 갑국의 행위를 규탄하며 을국에서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B에서 갑국에 대한 군사적 제재안이 병국의 거부로 인해 부결되었다. 한편 을국은 갑국의 전쟁 범죄를 이유로 갑국을 국가 간 사법적 분쟁을 다루는 국제 연합 산하의 기관인 C에 제소하였다.

<풀이>

A는 총회, B는 안보리, C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이다.

① 국가는 국제 기구를 C에 제소할 수 있다.

-> ICJ는 국가 간의 분쟁만을 재판한다.

② B와 달리 A는 C의 구성에 관여할 수 없다.

-> A와 B에서 ICJ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③ A에서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정 안건이 통과될 수 없다.

-> 안보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④ 병국은 B의 구성국 중 2년 단위로 새로이 선출되는 국가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

-> 거부권을 행사한 병국은 상임 이사국이다.

⑤ B에서 상임 이사국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는 안건이 존재한다.

-> 절차 사항은 통과될 수 있다.

20. ⑤ | 선거구 (난이도 ★★★★★)

갑국의 의회는 250명의 지역구 의원과 50명의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에 1표, 정당 투표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자를 선출하고 비례 대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 ㉠전체 의석에서 무소속을 제외한 수에 정당 득표율을 곱한 값에서 소수점을 버린 부분을 각 정당에 할당한다.
- 잔여 의석은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1석씩 할당해 할당 의석수를 산출한다.
- ㉡할당 의석수에서 정당별 지역구 의원 수를 뺀 값을 산출한다. ㉡이 음수라면 0으로 간주한다.
- 모든 정당의 ㉡ 합이 비례 대표 의원 총수보다 크거나 작으면 다음 계산식을 거쳐 조정 의석을 할당한다. 소수점이 나오면 버린다.

$$50 \times \frac{\text{각 정당별 } ㉡}{\text{㉡의 합}} = \text{각 정당별 조정 의석수}$$

- 조정 의석의 합이 50석보다 작다면 ㉡의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잔여 의석을 할당한다.

다음은 갑국의 T대 선거 결과이다.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계
지역구	70	85	45	46	4	250
정당 득표율	30	32	24	14		100

(단위: 석, %)

갑국은 다음과 같은 차기 선거 개편안을 고려하고 있다.

1안	현행 선거 방식을 유지하되 ㉡을 조정하지 않고 정당들에게 그대로 할당한다.
2안	현행 지역구 선거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을 정당 득표율을 비례 대표 의원 총수에 곱한 다음 그것의 정수 부분만을 할당하고 잔여 의석은 정당 득표율을 비례 대표 의원 총수에 곱한 값에서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1석씩 할당하는 것으로 개편한다.

각 정당들은 차기 선거 개편안이 자신에게 유리하면 찬성하고 불리하면 반대한다. 무소속은 모두 찬성하며 의회의 의결 조건은 우리나라와 같다. 이때 모든 의회 의원들은 개편안 의결에 출석한다.

우선 현행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자.

전체 의석에서 무소속을 제외한 수는 296이므로, 우리는 296에 정당 득표율을 곱해 ㉡을 산출해야 한다.

A당)

$$296 \times 30\% = 29.6 \times 3 = 88.8$$

B당

$$296 \times 32\% = 29.6 \times 3.2 = 94.72$$

C당)

$$296 \times 24\% = 29.6 \times 3 = 71.04$$

D당)

$$296 \times 14\% = 29.6 \times 3 = 41.44$$

그러므로 정리하면

A당	B당	C당	D당
88.8	94.72	71.04	41.44

소수점을 버리면

A당	B당	C당	D당	계
88	94	71	41	294

A당, B당 순으로 소수점이 크므로

A당	B당	C당	D당	계
89	95	71	41	296

이로써 각 정당별 할당 의석수가 구해졌다. 각 정당별 ㉡을 구하면

	A당	B당	C당	D당
할당	89	95	71	41
지역구	70	85	45	46
㉡	19	10	26	-5 -> 0

㉡의 총합은 19+10+26=29+26=55로, 비례 대표 총의석수인 50석보다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석 조정을 해야 한다. D당은 비례 의석 배분 대상이 아니다.

A당)

$$50 \times \frac{19}{55} = \frac{190}{11} = 17 + \frac{3}{11}$$

B당)

$$50 \times \frac{10}{55} = \frac{100}{11} = 9 + \frac{1}{11}$$

C당)

$$50 \times \frac{26}{55} = \frac{260}{11} = 23 + \frac{7}{11}$$

조정 의석의 합은 17+9+23=49이므로 1석이 남는다. 이때 ㉠의 소수점이 가장 큰 정당은 A당이므로 A당이 잔여 1석을 가져간다. 그러므로 선거 결과는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계
지역구	70	85	45	46	4	250
비례 대표	18	9	23	0	0	50
계	88	94	68	46	4	300

와 같이 된다.

이제 1안을 보자. 1안은

$$50 \times \frac{\text{각 정당별 } \ominus}{\text{㉠의 합}} = \text{각 정당별 조정 의석수}$$

의 계산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을 인정해 주므로 선거 결과는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계
지역구	70	85	45	46	4	250
비례 대표	19	10	26	0	0	55
계	89	95	71	46	4	305

이 된다.

2안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이다. 각 정당 득표율에 50을 곱하면 된다. 그런데 이는 %를 붙이지 않은 득표율 값을 2로 나눈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수는

A당	B당	C당	D당
15	16	12	7

이다. 따라서 선거 결과는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계
지역구	70	85	45	46	4	250
비례 대표	15	16	12	7	0	50
계	85	101	57	53	4	300

이다.

현행 선거 의석률)

A당	B당	C당	D당
$\frac{88}{300}$	$\frac{94}{300}$	$\frac{68}{300}$	$\frac{46}{300}$

1안 의석률)

A당	B당	C당	D당
$\frac{89}{305}$	$\frac{95}{305}$	$\frac{71}{305}$	$\frac{46}{305}$

2안 의석률)

A당	B당	C당	D당
$\frac{85}{300}$	$\frac{101}{300}$	$\frac{57}{300}$	$\frac{53}{300}$

이때, 1안 혼자서 분모가 305이므로 300으로 고쳐 보자. 공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begin{aligned} \frac{a}{305} &= \frac{x}{300} \quad (a = \text{의석 수}) \\ \rightarrow 300a &= 305x \\ \rightarrow 60a &= 61x \\ x &= \frac{60}{61}a \end{aligned}$$

그러므로 1안)의 A~D당 의석 수에 $\frac{60}{61}$ 을 곱하는 꼼직한 계산을 하면 된다. 단, 이때는 소수점을 계산하지 말고 정수와 분수를 분리하자.

A당)

$$88 \times \frac{60}{61} = \frac{5280}{61} = 86 + \frac{34}{61} = 86 \dots$$

B당)

$$95 \times \frac{60}{61} = \frac{5700}{61} = 93 + \frac{27}{61} = 93 \dots$$

C당)

$$71 \times \frac{60}{61} = \frac{4260}{61} = 69 + \frac{51}{61} = 69 \dots$$

D당)

$$46 \times \frac{60}{61} = \frac{2760}{61} = 45 + \frac{15}{61} = 45 \dots$$

따라서 최종적으로 각 선거 방식별 의석률은

현행 선거 의석률)

A당	B당	C당	D당
$\frac{88}{300}$	$\frac{94}{300}$	$\frac{68}{300}$	$\frac{46}{300}$

1안 의석률)

A당	B당	C당	D당
$\frac{86 \dots}{300}$	$\frac{93 \dots}{300}$	$\frac{69 \dots}{300}$	$\frac{45 \dots}{300}$

2안 의석률)

A당	B당	C당	D당
$\frac{85}{300}$	$\frac{101}{300}$	$\frac{57}{300}$	$\frac{53}{300}$

이제 현행 대비 1, 2안 의석률을 비교해 보자. 1안의 경우, A, B, D당은 모두 의석률이 현행보다 낮지만 C당은 높다. 그러므로 C당만이 찬성할 것이다. 반면 2안의 경우 A당, C당은 의석률이 줄었지만 B당, D당은 의석률이 늘었으므로 B, D당이 찬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1안, 2안 투표는 다음과 같이 된다. 찬성은 파란색, 반대는 분홍색이다. 이때 개편안에 투표하는 의회 원내 구성은 당연히도 현행 선거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의결 기준은 우리나라와 같고 모든 의원이 출석하므로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또한 문제 조건에 주어졌듯이 무소속은 모든 개편안에 찬성한다.

1안 투표)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계
88	94	68	46	4	300

찬성 72, 반대 228로 부결

2안 투표)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계
88	94	68	46	4	300

찬성 144, 반대 156으로 부결

결국 선거 제도는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제 선지를 보자.

① 2안을 적용하면 A당은 과대 대표된다.

-> 2안 적용 시 A당 의석률은 $\frac{85}{300}$ 이다. A당의 득표율은 30%이므로 $\frac{90}{300}$ 이다.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많으므로 A당은 과소 대표된다.

② 1안을 적용하면 4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한다.

-> 1안 선거 결과를 보자.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계
지역구	70	85	45	46	4	250
비례 대표	19	10	26	0	0	55
계	89	95	71	46	4	305

5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한다.

㉓ T대 선거 결과 C당이 비례 대표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다.

-> T대 선거 결과를 보자.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계
지역구	70	85	45	46	4	250
비례 대표	18	9	23	0	0	50
계	88	94	68	46	4	300

C당은 비례 의석 23석을 차지하며, 50석의 과반은 26석이므로 비례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㉔ 1안에 따른 선거 결과에서는 2개 정당의 현행 선거 대비 의석률이 감소한다.

->

1안 투표)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계
88	94	68	46	4	300

찬성 72, 반대 228로 부결

의석률이 증가하면 찬성하고, 줄어들거나 같으면 반대하는데, 3개 정당이 반대했으므로 3개 정당의 현행 선거 대비 의석률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㉕ 차기 선거에서도 현행 선거 제도가 유지될 것이다.

->

1안 투표)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계
88	94	68	46	4	300

찬성 72, 반대 228로 부결

2안 투표)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계
88	94	68	46	4	300

찬성 144, 반대 156으로 부결

1안과 2안은 모두 부결될 것이므로, 차기 선거에서도 현행 선거 제도가 유지될 것이다.

* 1안 의석을 파악하기: 실전적 풀이

현행)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계
지역구	70	85	45	46	4	250
비례 대표	18	9	23	0	0	50
계	88	94	68	46	4	300

1안)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계
지역구	70	85	45	46	4	250
비례 대표	19	10	26	0	0	55
계	89	95	71	46	4	305

분모가 늘었으므로 선거 결과에 변함이 없는 D당은 의석률이 줄었을 것이다. 그리고 A당과 B당의 경우, 의석은 1석씩만 늘었는데 분모가 5 커져서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크므로 오히려 의석률이 약간 줄어들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의석률을 파악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